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메가시티와 공공 문화기관

14호

2022.01.-02.

column 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issue 이슈 1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 지역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 손경년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issue 이슈 2	경쟁 혹은 상생? 부울경 공공미술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이진철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issue 이슈 3	부울경 문예회관 협업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문화+출판	시민과 지역 중심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 장현정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출판사 대표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김선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1.~02.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4호 | 2022.01.-02.

2022년, 이번 한 해는 "문화를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방안"이라는 연간 주제를 통해, 각 호별로 다양한 시선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4호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한 칼럼, 부울경 지역 공공 문화기관의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 출판사의 상생 방안에 대해 구성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부산연구원과 부산문화재단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문화영향평가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Contents

- | | |
|--|--|
| 03 column 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 12 issue 이슈 3
부울경 문예회관 협업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
| 06 issue 이슈 1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
지역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
손경년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 16 문화+출판
시민과 지역 중심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
장현정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출판사 대표 |
| 09 issue 이슈 2
경쟁 혹은 상생?
부울경 공공미술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이진철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20 정책보고서 토크보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김선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
| | 22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

남 송 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의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나온 적폐의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이다. 이는 일극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다극주의의 지향이며, 온전한 지역분권을 통한 삶의 진정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길이다.

그런데 이의 실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이 현재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모양새이다. 법적인 토대는 갖추어졌지만, 이미 관성화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 각각의 자치행정을 허물고 새로운 부울경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그렇게 손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너무 정치, 경제적인 관점으로만의 접근이 빛은 결과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상 각각 나뉘어져 있던 부울경의 관행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부울경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동안의 지역 자치를 통해 일구었던 자구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이 승화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요소만이 아니다. 정치, 경제적인 가치와 지향을 추동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따로 있다. 그것이 문화력이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인류문화사를 통찰하면서, 인간이 지닌 문화력이 인간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끈 선진 민주국가의 발전의 토대는 그 나라 시민들의 문화력이었고,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경제대국의 밑바탕에도 한층 더 높은 문화적 지수가 작동하였음을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정치, 경제가 한 나라의 발전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성원이 내장한 문화력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화력의 어떤 부분이 공동체를 하나의 가치와 온당한 지향점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문화가 지닌 공감력이다. 문화의 정의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문화란 동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총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공유하면 할수록 공감대를 확대·심화시켜나가는 매개로 작동한다. 특히 예술문화는 이를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다. 보편적으로 예술문화의 창작자들이 향유자를 향한 공감대의 형성을 근원적으로 지향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예술문화의 다양한 양상과 작품들은 일차적으로 인간이 지닌 감성을 건드려 공감의 진원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지닌 공감적 참여의 좋은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점이다. 공감적 사유의 공유와 그 실천 없이는 온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현이 힘들기 때문이다.

공감적 세계인식은 자율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맥을 같이 하며, 이 체계이론은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지닌 이러한 공감적 성향은 꾸준히 연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마를 위한 하나의 좋은 매개가 문화예술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늦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의 공공 문화기관들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부울경에 산재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느슨한 연대로부터 끈끈한 연대로의 이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산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미 협약을 맺은 바를 토대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우선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일이다. 공유를 통해 함께 협력해야 할 지점과 문제점을 협의함으로써 부울경 문화권(동남문화권)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 문화권 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울경 문화프로젝트를 완성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문화재단이 그 동안 펼쳐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 한 바탕 위에 새롭게 열려질 부울경 문화권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여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재단 정책팀이나 기획팀이 상시적으로 만나 빠른 시일 안에 <부울경 문화비전 2030> 기초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울경 전 지역 시민들의 온전한 문화권 향유를 위해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추동하고, 이와외 긴밀한 연대를 확대·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부산에는 금정구와 부산진구, 경남에는 창원문화재단, 사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밀양문화재단,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창문화재단이 울산에는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준비 중)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정도의 기초문화재단 설립으로는 부울경 지역 전체의 문화진흥을 제대로 일구어 나가기 힘들다. 최소한 부울경 지역 시군구에는 하나 이상의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부울경 문화본권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부울경 문화분권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문화기관이 문화원이다. 한국문화사를 점검해보면, 한국문화진흥을 위해 제일 먼저 설립된 단체가 문화원이다. 한국문화사의 영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체이다. 관변문화 창출의 원천이었다. 문화재단이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이끌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진행, 실버문화 페스티벌 운영,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은 문화재단과 같이 광역문화원 조직과 지역문화원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 문화원 연합회로 조직되어 있다. 진정한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이나 본부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해체하고, 각 지역이 수평적으로 평등한 연합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소위 중앙의 한국문화원에서 모든 예산과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한 지역문화 분권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역문화원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과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 지역의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일차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그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수용층의 욕구에 따라 문화재단이 관장해야 할 것과 문화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을 분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울경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화원 수가 문화재단 수보다도 훨씬 많다는 점은 이들의 관계 정립이 그만큼 큰 과제임과 동시에 풀어나가야 큰 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부산에는 14개의 문화원이, 울산에는 5개의 문화원이, 경남에는 20개의 문화원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원을 방치해 두고 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부울경 전체 문화의 미래 조감도를 그리고 실현해 나가기에는 많은 결략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층의 수요가 많은 문화원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부울경 지역문화의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프로그램이나 문화기획의 역량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문화원의 체질을 바꾸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협력과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해본 적이 없기에 부울경 지역에서는 기존 모든 문화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부울경 동남문화권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관계정립과 협력체계 구축은 선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부울경 지역에 세워나가야 할 시군구 기초문화재단의 설립과 기존 문화원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울경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현실 대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울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해서 문화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부울경 문화예술인들의 연대 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 지역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

손경년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김해문화재단의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김해예술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한 지원 사업이다. 말하자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구분 짓는 짓을 하지 말자는 것, 지속적인 성장 동기를 재단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자는 것, 그 결과 시민들에게는 좋은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재단은 상생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지역’이라는 용어에 갇히지 말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의 상생 그리고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선착순 방식의 공모, 심사가 아닌 협의를 통해 42개의 공연과 함께 ‘김해 미술인 다(多)모임’전 10인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예전의 심사방식을 벗어나 김해 거주자, 예술인활동증명서의 확인이라는 첫 번째 기준, 젠더 감수성 및 환경생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제안서 요청이라는 두 번째 기준을 제시, 전문 예술인의 창·제작을 우선하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적 지평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재단 설립목적의 두 축, 즉 ‘지원’과 ‘향유’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라는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을 다시 숙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되짚어보면 1997년에 광역으로써 경기문화재단이, 2001년에 기초로써 부천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문화재단설립의 역사가 20년을 넘었다. 올 2월 기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현황자료에 의하면, 기초문화재단은 113개이고, 광역문화재단은 17개로 총 130개의 문화재단이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를 보면 자치단체장의 지역문화재단 설립 공약은 이제 보편화된 듯하다. 처음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재단은 알겠는데 문화재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야’라고 질문을 했던 시절도 있었으니 격세지감이 든다.

잠깐 시선을 돌려보자. 저출생¹과 고령화의 우려가 지속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2년 6월 23일 오후 7시, 5천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소위 ‘20-50클럽’²이라는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 독일, 영국 등 6개국이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구촌의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였다 하여 기념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2020년 기준 인구수를 보니 50,825,557명으로 큰 폭의 인구증가는 더 이상 없었다. 또 2020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출생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고령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 쇠퇴, 소멸이라는 단어가 도시 앞에 붙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뉴스를 보고 놀랐던 것으로, 2021년 전국의 89곳이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인구감소지역에 광역도시 중 부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 정책의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나, 실행 과정의 정교화와 이후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년 유출, 고령화, 도시기능의 쇠퇴 등의 문제로 결국 정책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6,038,307명으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는데, 비율에서 보듯 수도권은 과밀화 상태이다. 지역 내총생산(GRDP)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 경남권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총소득(GRI)도 마찬가지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자원 투입이 있었지만, 아직도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는 자구책이자 지역전략으로, 2018년 '경남의 동남권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산어촌 등을 모두 연계, 영남권, 남중권에 이르기까지 유연한 광역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해 경남·부산·울산(이하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안되었다. 경남권의 광역적 의제 처리 등 행정의 효율화,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을 높여 생활권이라는 인식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물 관리체계 및 먹거리 공동체 형성 등 경남권 자치단체의 협력적 광역경제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이 본격화된다면, 적어도 경남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학순(2021)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가속해왔던 근거로, 문화예술의 특성과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팔길이 원칙의 강조와 전문성과 유연성,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역량을 발휘하는 조직으로서의 지역문화재단을 기대하고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³ 그러나 본래 추구했던 설립의 정당성과 달리 지역문화재단들은 날이 갈수록 관료성, 경직성의 경향을 보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행정 여건도 여전히 미흡하며, 국가사업 확보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1 저출산(低出生)은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이며, 저출생(低出生)은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문체부는 2019년 7월 2일 자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처음으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했다. 물론, 아직도 저출생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참고, <여성신문> 2019년 7월 18일 자,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입니다"(이하나 기자)

2 '20-50클럽'은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뜻한다.

3 임학순(202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미래", 웹진 <예술경영> 467호(20210610), 예술경영지원센터

는 비판도 상당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기대만큼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논평이다. 처음 '장밋빛 꿈'을 갖고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지만 점차 또 하나의 관료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만신창이가 된 셈이다.

그러나 좌절보다는 현재 130개의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다시금 지역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및 실행을 통해 지역 환경과 특성의 반영,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도를 견인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 주체들의 거버넌스와 시민력 증진을 위한 시도가 가능해졌다. 말하자면 자치와 분권의 점진적 구현 과정에서 지역문화정책에서도 문화분권이 도시의 중요한 실천 의제로 등장,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 방향성 등의 재정립을 고려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 사업 확장과 맞물려 지역문화재단들은 기초단위 지역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축제 개최 등으로 축소되어 있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생태계의 '소통자-연결자-조정자-지역문화와 예술의 가치 옹호자-혁신자'⁴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현실화 된다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수요공급 방식과 다른, 해양문화권과 낙동강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기후위기, 문화다양성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점으로서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및 마르지 않는 '문화콘텐츠 생산고'로서의 지역문화재단, 개인과 사회, 그리고 도시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미션과 함께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엮고 매개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짚개고 묶어서 '삶의 개선'과 '행복도'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유연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4 상동(上同)

경쟁 혹은 상생?

부울경 공공미술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이진철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국적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쟁점이 되었을 때 각 지자체들은 상생의 방안을 찾지 않았다. 각 지자체는 나름의 타당성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공립미술관들은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문화재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산, 울산, 경남의 공립미술관도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그리고 올해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을 포함하여 모두 8곳의 공립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5년 개관예정인 창원시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표 1> 부울경 지역 공립미술관 현황 (출처 : 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역	운영주체	미술관명	소장품 종류	소장품 점수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립미술관	평면, 입체, 기타	2,829
	부산광역시	부산현대미술관	설치, 조소, 뉴미디어, 영상, 사진, 회화	287
경 남	경상남도	경남도립미술관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1,317
	창원시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조각, 회화, 유품(공구 등)	3,985
	김해시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회화, 조각, 서예, 서각 등	352
	김해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도자 작품	1,291
	진주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회화, 판화, 드로잉, 도자기	376
울 산	울산광역시	울산시립미술관*	영상, 뉴미디어, 입체, 설치, 사진, 평면 등	112

* 울산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제공 자료임(2022년 2월 현재)

경쟁 혹은 상생?

2021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에서는 「문화와 지역발전: 영향 극대화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박물관을 위한 지침서」를 공개하였다. ICOM과 OECD가 공동으로 출간한 이 지침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박물관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서 말하고 있는 ‘박물관’을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미술관’으로 이해하자면 미술관이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지역의 관광개발, 도시재생 및 공동체 개발, 문화인식과 창의사회 촉진, 그리고 포용과 건강 및 웰빙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의 미술관이 지역문화발전의 주도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과 경제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은 미술관 관계자들에게 이미 널리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내 국립미술관들은 각 지역의 미술문화진흥을 주도하면서 광역경제권에도 기여하는 상생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듯이 광역경제권이 되면 오히려 승자독식의 경쟁관계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 대중교통망의 확대로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도시들이 연결되고 이동이 쉬워지면 각 지역 공공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그리고 일일 관람객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될까? (사)문화다움 대표 추미경은¹ “메가시티에서의 문화전략은 지역문화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남권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독자적 가치로 포지셔닝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문화의 내면적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컬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적 가치를 포지셔닝하는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불가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술관

미술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메가시티 내 각 미술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으로 대체불가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강력한 킬러 콘텐츠는 외피적이고 현란한 마케팅 기법을 넘어선다. 일례로 울산시립미술관은 개관에 앞서 소장품을 수집하면서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술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백남준 작가의 「시스틴 채플」을 구입하였다. 「시스틴 채플」은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에 출품된 작품으로 백남준 작가에게 그 해 베니스비엔날레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쥐어준 작품이다. 「시스틴 채플」은 2019년 영국 테이트모던미술관 백남준 회고전에서 재현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싱가포르국립미술관을 순회하면서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으로 소개되고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이 된 이후에도 「시스틴 채플」은 백남준 전시를 준비 중인 국내외 미술관으로부터 대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1 추미경, <동남권 메가시티 vs 작은 서사가 살아있는 창조적 로컬문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웹진 34호, 2021



백남준, 시스템 체플, 1993/2021 (installation view, Nam June Paik, SFMOMA, 2021)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 등메가시티 내의 각 미술관들이 서로 대체불가한 소장품과 나름의 독자적 전시를 기획해 나갈 때 서로의 협력과 상생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미술관이 각 지역의 미술을 재조명하고, 서울 중심의 미술사 서술을 보완함으로써 균형잡힌 한국미술사를 서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각 미술관들이 고유하고 독자적이며 지금보다 더 매력있는 콘텐츠와 미술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반일 생활권 또는 일일생활권 내에 있는 메가시티 내 미술관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각 미술관들은 경쟁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 서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만의 독자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 지역에 소재한 공·사립 미술관들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술관 협력망 사업”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내의 각 미술관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협력망 사업과는 별개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만의 독자적인 미술관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만들어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내에 미술관 운영, 연구 및 인력지원,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미술문화 향유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메가시티 내 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나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안으로는 공동 수장고형 미술관의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장시설의 부족은 개별 미술관들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공동 수장고형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소장품의 보관과 관리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한곳에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부울경의 지역미술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의 건립도 제안한다. 한때 부산, 울산, 경남은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 경상권이라는 한 지역이었다. 예술작품은 인위적인 행정구역을 따르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문화예술사업의 지역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가 목적인 프랑스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CRAC) 제도와 미술은행처럼 소장품 확보의 형태로 지역 신인 작가들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지방재단(FRAC)의 운영 등 해외의 지역미술진흥 제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만의 독자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이 추진되는 즐거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부울경 문예회관 협업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1. 문예회관 현황

1980년대 들면서 정부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예회관¹ 건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80년대까지는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90년대 들어서는 기초단체들까지 확산되었고 2021년 현재 전국 243개 광역 및 지자체의 107%에 해당하는 260개 문예회관이 건립되었다.² 전국의 공연시설은 총 1,007개이며, 서울지역에 340개로 전체의 33.8%이고, 경기와 인천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시설 수가 총 498개로 전체 공연시설의 4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³ 또한, 시설특성별로는 중앙정부 12개, 문예회관 260개, 기타(공공) 234개⁴, 대학로 지역 시설 101개, 민간(대학로 외) 400개이다.

문예회관은 설립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고,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기구, 책임운영기관, 특수법인, 민법상의 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260개 문예회관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소가 전체의 57.3%인 149개이고, 42.7%인 111개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⁵

1 『2005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06.1) p57 “문예회관이라함은 국고에서 일정액의 ‘지방문예회관’ 건립 지원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으로서, 일반 집회시설인 시군·구민회관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예술시설을 말한다.”

2 『2021 공연예술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12) p89

구분	1969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이후	합계
공연시설	3	12	62	157	338	435	1,007
문예회관	0	5	26	69	94	66	260

3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공연예술조사』 (문화관광부, 2021. 12) p85, p144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공연시설	340	64	55	33	33	36	18	3	125	44	26	35	45	34	42	51	23	1,007
공연장수	435	84	73	40	39	42	22	3	172	61	30	52	59	52	60	76	25	1,325
문예회관	21	11	11	9	7	5	5	1	44	23	11	19	15	20	32	23	3	260

4 『2021 공연예술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12) p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은 공공 공연시설(등록공연장에 한함)(예. 강동구민회관, 인천청소년수련관 등)

5 『2021 공연예술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12)

<표 1> 문예회관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문예회관수	직영사업소			위탁운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상법인	교육기관	개인	기타
합계	260	13	136	18	83	6	-	2	1	1

문예회관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다양해졌고 커졌다. 다수의 문예회관들이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주체를 바꿔야 한다거나 예술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단법인과 민간위탁기관의 재정 상태가 직영과 공단보다 더 열악하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보다 직영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세는 민간 전문가 집단에 게 시설을 맡겨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자립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은 1999년 7월 독립 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했고, 국립극장은 2000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⁶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예술의전당은 재단법인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⁷으로 전환하여 그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

II. 부울경 문예회관 현황

부울경에는 현재 부산 11개, 울산 5개, 경남 23개 등 모두 39개 문예회관이 운영 중이며, 재정자립도는 부산 7.1%, 울산 4.6%, 경남 4.0%로 부산만 전국 평균 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연장 가동률과 프로그램 가동률은 각각 부산이 20.4%, 17.5% 울산이 23.3%, 21.3% 경남이 11.8%, 10.2로 나타나 전국 평균 16.6%, 13%보다 부산과 울산은 높게 경남은 낮게 나타났다.⁸ 운영주체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부산 7개, 울산 4개, 경남 13개 등 39개 기관 중 61.5%인 24개로 나타났으며, 재단법인 등 민간 위수탁 시설은 부산 4개, 울산1개, 경남 10개로 나타났다.⁹

부울경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에 1개 이상의 문예회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운영 내용과 성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대에 맞추어 부울경 지역 39곳에 운영 중인 문예회관을 문화분권의 거점 시설로서 그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6 책임운영기관은 국공립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극장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외부에서 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하는 형식

7 특수법인이란 정부정책상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사(公私)로 사장,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이 구성되어 운영을 하며, 대개의 경우 정부가 그 책임자를 임명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8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공연예술조사』 (문화관광부, 2021. 12) p62, p144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재정자립	17.6	7.1	9.2	2.0	2.6	8.8	4.6	2.5	3.1	2.6	2.2	2.6	4.8	2.1	3.1	4.0	1.0	4.7	
가동률	공연장	26.1	20.4	21.4	14	27.4	30.0	23.3	18.1	13.6	12.4	21.5	12.9	22	12.5	11.5	11.8	40.5	16.6
	프로그램	18.4	17.5	19.9	10.7	24.1	25.5	21.3	16.2	10.1	9.3	15.7	8.9	17.2	8.6	8.7	10.2	35.6	13.0

9 <https://www.kocaca.or.kr>

III. 제안내용

1) 부울경 문예회관 연합법인 출범

현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 부울경지회의 지위에서 벗어나 별도 법인화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문연에서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프로그램 선정 시 예산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작품은 부울경연합회에서 선정, 지역 문예회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작품이 국비와 문예회관 매칭 예산으로 지역의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합 예술감독제 도입

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문예회관은 차치하더라도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중인 24개 문예회관의 경우 통합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여 연중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컨셉과 방향을 계획적으로 정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중복에 대한 논란과 예술성과 공공성 시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외 유명 공연 공동 유치

매년 통영국제음악제 기간이 되면 부산의 클래식 매니아들이 통영으로 공연 여행을 떠난다. 시간을 내지 못해 가지 못하는 분들은 부산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한다. 그래서 간혹 사전 협의를 통해 부산공연이 성사되기도 한다. 통영국제음악제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연극제 등 부울경 내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개최 중인 국제행사의 프로그램을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 순회공연 추진하면 여러 모로 이득이 많을 것이다. 이를 제도화해서 부울경 관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란다.

4) 2030엑스포 홍보 및 축하공연 공동제작

2030엑스포 개최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문화분권 실현의 새로운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 성공을 위해 부울경 문예회관 모두가 적극 협력하고 그 성과도 부울경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부울경 문예회관 연합법인에서 연출, 배우, 안무 등 지역예술인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용 작품을 공모해 공동제작 후 순회공연한다면 2030엑스포 유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상주단체페스티벌

문예회관 공간 활성화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부산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8월경, 경남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11월경 개최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20여개 상주단체가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기를 달리해 각각 개최되고 있는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지역을 순회하며 같은 시기에 대규모 페스티벌로 개최하고 전국의 문예회관 관계자들과 기획자를 초청해서 지역 공연을 소개하면 지역 공연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무대미술세트장(수장고) 건립

국내 공연예술계에서는 그동안 무대장치 보관을 위한 공간이 없어 각종 도구 및 장치 등의 조기폐기로 예산낭비 및 우수레퍼토리 축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무대세트, 의상 등 무대용품의 손상으로 재사용이 어려웠으며 외부 보관장소 임대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꾸준히 무대미술세트장(수장고)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더불어 부울경 무대미술세트장을 건립하여 부울경 문예회관의 제작공연 및 대관공연에 따른 보관장소를 제공하고 세트장 견학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가 2021년 4월 입찰을 통해 추정가격 기준 179억원으로 경기도 파주시 법흥리에 지상 3층(연면적 1만3442.6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7) 공연 영상화 스튜디오 건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의 형식과 제작 그리고 유통 방법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 공연장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갖추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조명, 음향 장비나 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좋은 기획과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예술의전당에 공연영상화 종합제작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품질 공연 영상 제작, 온라인 공연 생중계, 민간단체 공연 영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에서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영화 세트장처럼 온라인 공연 영상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비치하고 전문 기술인력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과 지역 중심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

장현정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출판사 대표

지난 1월 27일,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가 출범했다. 3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34개 출판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2019년에 김혜린 시의원의 발의로 지역출판조례를 마련한 바 있지만, 직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데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출판 관련 시정(市政)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터라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별 성과 없이 지나갔다. 그러다 올해 초 협회가 출범하면서 다시금 부산시와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롭게 지역출판의 가치를 되새기며 출판이 지역 문화의 새로운 활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마련 중이다.

왜 지역이고, 왜 출판일까. 근대 이후 세계 지식 담론의 서구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단일국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출판과 문화예술뿐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형적일 정도로 심했다. 이는 곧바로 정신과 문화의 식민성으로 이어진다. 지금도 부산은 입버릇처럼 늘 서울을 의식하고 서울과 비교하며 오래된 콤플렉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처온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출판은 진흥의 대상이기보다 억압과 금지의 대상이었다. 통제된 지식과 담론만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되었고 지역마다 고유한 출판과 독서문화가 자리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한국 출판, 나아가 지역출판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단행본 출판사 수는 2,013개로 파악된다. 이 중 1,277개가 서울에 있고 수도권까지 합하면 1,696개이다. 전체 출판사 중 80%를 훌쩍 넘는 출판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부산에는 41개, 대구에는 35개, 광주에는 37개, 대전에는 33개의 출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자책 출판 제작업의 통계를 봐도 128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부산에는 2개 회사만 등록되어있다.

출판 관련 지원사업도 오랫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출판 관련 법

령과 제도도 2002년 김대중 정부에 와서야 처음으로 마련되었는데 지역출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고민은 이후로도 한참이 지난 2015년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정부에서도 출판에 어떻게 육성하고 지역의 독서문화와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출판, 도서관, 서점 등 여러 정책이 따로 놀며 공회전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2002년에 한국의 출판에 대한 정책이 막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면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이제 지역의 출판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정식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사회의 변화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단순히 종이책으로서, 올드 미디어로서의 출판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원천콘텐츠로서의 출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많은 분야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뜨겁고 SNS와 유튜브 등 콘텐츠와 미디어 환경도 격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출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적 전망도 많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처럼 책은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또 다른 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 출판에는 숫자로 환치되지 않는, 디지털의 방식과 영역으로 포섭할 수 없는 아날로그만의 역능(puissance)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웹툰, 영상, 어플리케이션, 나아가 공연이나 축제까지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 출판이 위기라고 하지만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모이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및 연결성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지역(local)'의 가치를 새롭게 증폭시킨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지역의 지식과 문화, 서사와 담론을 물리적 차원의 지역에만 가두지 않는다. 지역출판의 성과를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과 출판이 만나는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출판이 가진 문화로서의, 또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대변화와 조응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부산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창조콘텐츠 육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런 시기에 그 원천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지역 출판산업의 가능성과 전략에 대한 관심과 육성은 긴요하다. 산업의 여러 분야가 AI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도시의 미래가 무형의 서비스, 특히 콘텐츠 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지역의 출판사들이 연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며 출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은 그래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평한다.

도시의 성장에는 문화와 산업이라는 두 축이 모두 필요한데, 출판이야말로 문화와 산업의 특징을 함께 갖는 분야다. 출판은 오랫동안 소수의 엘리트, 지식인들만의 영역이었지만 문맹률이 낮아지고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출판의 주체로 거듭나며 독자와 저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신춘문예 등단, 유명인사, 교수, 전문가 등이 중심을 이루던 저자 군(群)이 저마다 SNS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콘텐츠를 유통하며 다중(Multitude)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보다 더 편하

게 넘나들 수 있는 출판의 대중화와 저자 발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더구나 지역의 신인 저자들과 독자들의 유출도 심한 상황이다. 글쓰기, 독서 등 출판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는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의 출판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천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출판은 이미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긴밀히 연결되어왔지만 나아가 디자인, 영상, 아카이빙, 교육 및 강연, 도서전과 같은 축제, 인문 투어, 도시재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의제와 연동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2022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전체 회원사 3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29개 회원사가 참여해주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인 출판사의 설립 붐이었다. 협회는 또한 2월 14일과 22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출판, 서점, 도서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도 가졌다. 무엇보다 출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은 출판, 도서관, 서점 등 독서문화 정책이 따로 놓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장서 구입비 확대, 공공도서관 증설과 작은 도서관들의 확대 개편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고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또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서점을 통해 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점이라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아무 지역, 아무 업종이나 입찰을 하는 제도적 맹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 도서관의 사서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출판물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최근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서점 중 하나였던 아스트로복스가 5년 만에 폐업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 서점들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점은 독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출판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미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협회는 올해부터 여러 사업을 준비 중이다. 특히 그동안 부산의 출판이 문화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왔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취약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지역의 콘텐츠와 가치를 확산하고 자체적으로 규모 있는 기획을 추진하려면 이제부터는 비즈니스로서의 출판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현재 협회는 교육, 지역 콘텐츠 출판지원, 회원사 간 정보 공유 및 대외 홍보, 공동 시리즈물 기획, 지역 유관 콘텐츠 산업 연계, 지역 출판인 권리 보호,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Busan Publishing Culture and Industry Association)의 이니셜을 딴 'BPCIA 어워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독서문화 확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산출판산업연구지원센터나 부산북비즈니스센터 설립과 지역의 향토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출판기금 혹은 모태펀드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출판사들과의 교류와 지역 출판사들에 가장 시급한 공간인 창고 확보를 통해 재고관리나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도 마련하고자 한다.

나는 출판 관련 특강을 하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출판은 문화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분야든 시작할 때 책(기록)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하나의 프로젝트 혹은 삶이 끝나도 역시 책(기록)으로 남기게 마련인데 그렇게 책(기록)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이제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지식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만의 구체적 맥락(context)을 훑어보고 이를 독자들의 시대적 감수성에 조응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기존 출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전환해 지역의 청년들과 수시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처럼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는 유럽의 작은 국가 하나라고 봐도 좋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부산이 계속해서 서울을 의식하거나 단일국가 내부의 시야로만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산은 335만 인구에 출판 예산은 4,000만 원 수준인데 공연 하나를 만드는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회와 부산의 출판사들에게도 숙제가 많다. 지원만 바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누구라도 매력을 느낄 만한 디자인과 결과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시도가 계속되고 여러 자리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체질을 바꾸며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이 동남권 출판산업의 중심점이자 노드(node)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사람, 또 많은 기관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 속 한 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새로운 것은 변방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문장이다. 부산의 출판사들이 협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맺는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김 선 애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시의 계획·정책 관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평가 대상 정책의 성격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의 재인식 등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영향평가는 부산 실정에 맞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2019년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1년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개발 용역」을 완료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비도시 선정 후 예비사업 기간 내 문화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현재 부산시는 영도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북구가 예비도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영구가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고 공유하는, 누구에게나 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는 연구진, 관계자, 평가단 그룹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각 그룹별로 평가기준 중요도, 평가지표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평가기준의 중요도 비교에서 연구진은 실현·지속가능성을, 수영구 관계자는 파급효과를, 평가단은 거버넌스를 1순위로 보았다. 평가지표 중요도 비교에서는 연구진은 지역문화가치를, 수영구 관계자는 문화발전을, 평가단은 문화기본권을 꼽

아 문화도시 계획을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평가기준 대비 평가지표 쌍대비교·분석을 보면 실현·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문화가치'와 '문화기본권'이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파급효과 관점에서는 '문화발전'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버넌스 관점 역시 '문화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발전'을 위해서 사업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 권한위임(Empowerment),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지표 중요도는 문화발전 > 문화기본권 > 지역문화가치 > 문화정체성 순으로 드러났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특수성, 개념,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영향평가 지표 우선순위로 문화발전의 지표영역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이 파악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발전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문화도시 사업에서 왜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는지 이어진다. 또한 본도시 지정이 되면 매년 성과검토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게 되며 '거버넌스 구축'이 별도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되어 지역 자율성 및 책임성 부족, 실효성 의문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므로 전반적인 수행과정에서 국가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도시전략 차원에서 사업범위가 설정되는 특성 상 지자체 등의 사업여건 조성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수행과 목표가 단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시간전략은 단계에 따라 중시해야 할 평가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진, 관계자, 평가단 그룹별로 중요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 어느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문화영향평가는 '사업여건 조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준비·예비 단계 - 본단계 1년차 - 본단계 5년차 등 사업의 단계별 평가지표를 차별화·적용하면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부산형 지역특성화 지표와 SDGs 지역화

부산형 지역특성화 평가영역인 '지역문화가치'는 개방, 포용, 미래가치라는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네스코 2030 INDEX, SDGs 지표가 반영이 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지표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되어 제시된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의 구체적인 평가실행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 부산권 외 SDGs 이행 관련 다양한 협력 구조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SDGs 이행의 화두는 '지역화'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문화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문화적 방안으로서 모색되길 희망한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1. ~ 2.

부산문화재단

- **새로운 부산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2.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시설을 대상으로 “2022 부산 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 **빈집을 예술로 반짝반짝 밝혀줄 ‘반딧불이’ 예술가를 찾습니다!(2.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도심 속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입주예술가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2022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공모(2.21)**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오는 3월 22일까지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하기 위한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과 기술 융합 협력 확대 지원(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월 6일(목) 오후 7시, 카이스트(KAIST)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와 카이스트(총장 이광형)의 교육·연구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문화예술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1.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 **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2.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창작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실험의 장 '창작 실험활동 과정과 공유'(2.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결과발표회 <창작실험활동 과정과 공유> (이하 과정과 공유)'를 이달 11일부터 3월 3일까지 CJ아지트 대학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온라인에서 찾으세요!(2.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박종관)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2 아르코 예술인력지원 온라인 잡마켓>(이하 잡마켓)을 개최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출범(2.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2022년 2월부터 3개월간 청년예술 TF를 운영한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달라집니다! '3대 전략, 10대 혁신안' 발표(1.26)**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에 8대 대표이사로 임기를 시작한 이창기 대표이사의 취임 100일을 맞아, 2022년에 중점 추진할 <3대 전략, 10대 혁신안>을 26일(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발표했다.

- **거리 두기로 비어있는 객석 티켓값 지원하는 <사이채움> 시즌 2 공모(2.28)**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포르쉐코리아(대표 홀가 게어만)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된 공연예술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원 사업 <사이채움> 시즌 2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진행한다.

강원문화재단

- **'강원트리엔날레 in 평창' 출범식 개최(1.19)**

강원도(강원도지사 최문순)가 주최하고 (재)강원문화재단, 평창군, 평창문화도시재단이 주관하는 '강원트리엔날레 in 평창' 출범식이 1월 19일(수) 평창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 미팅룸에서 열렸다.

대구문화재단

- **대구예술발전소, 연간계획 발표(1.19)**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2022년 연간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19일(수) 발표 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4호

2022.01.-02.



9 772713 411008
ISSN 2713-411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2.02.28.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